

2050년 탄소중립, 제대로 된 법안 마련에서부터 시작해야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오동재

[2050 탄소중립 관련 청년단체들의 주요 활동]

- 2019년 12월 저탄소사회비전포럼 의견서 제출
- 2020년 5월 청와대 앞 탈석탄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7월 광화문 앞 '그을린 뉴딜' 퍼포먼스
- 2020년 7월 LEDES 전문가 토론회 단상 점거 발언
- 2020년 10월 LEDES 대국민 토론회 발언
- 2021년 2월 탄소중립이행법안 입법 공청회 청년단체 의견서 제출
- 2021년 4월 미국 기후정상회담 전 미 대사관에 한국 기후정책 관련 서한 발송
- 2021년 4월 23일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불복종 기자회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법안의 역할이 지대한 상황에서, 법안에 어떤 원칙들과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향된 2030년 감축목표 못 박아야]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률안에 2050년의 목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의 목표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종결시점만큼 중요한 것은 경로를 어떻게 그리느냐입니다. 완만하게 줄일수록 우리가 내뿜을 온실가스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해 536백만톤을 배출하겠다는 현재의 감축목표는 2015년에 만들어진 과거의 목표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불룩한 감축경로가 그려집니다. 넓어진 면적만큼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은 모두 다 써버리고, 이후에 급격하게 감축을 해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용을 부담해서 감축해나가지 않으면, 감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온전히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일 겁니다. 부디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을 나중에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통합적, 독립적인 전문 연구기관의 투명한 운영]

그 다음은 탈탄소 사회 이행 및 점검을 위한 정책 자문, 연구, 시나리오 분석 등을 시행할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의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이해관계와 독립되어 연구들이 이뤄지고 방법론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넷제로로 가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넷제로 달성을 위해 가용가능한 수단과 방법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도출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간 부처의 정책과 이해를 대변하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들,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와 방법론, 건설적인 토론의 부재가 지적되진 않았는지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기보다, 정책이 먼저 나오고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수집되는 (policy based evidence making) 것에 더 가깝진 않았는지요

과학이 얘기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한국사회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이것 해결할 시에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청년단체들이 수차례 부탁드리며, 그리고 그 위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건 언론플레이 뿐이었습니다. 여러 번 정책제언 과정에 참여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늘리는데 2050년 탈탄소 전력망 구축에 326조원이 들어간다고 언론과 공식 토론회에 나와서 솔하게 발언을 해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서의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런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경연의 보도자료가 나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쭙봤더니 그런 데이터는 연구기관끼리도 공유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요구해도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이 나오는게 아닌, 정책이 먼저 선언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와 증거들이 모이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수소차와 수소경제, CCS, 핵융합 기술을 포함해서 누가 밀었는지 모를 정책들이 먼저 나오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 애먼 돈들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구요. 이 기술들이 과연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건지, 어떤 한계가 있는건지 다른 수단들과 같이 먼저 객관적으로 연구가 된 후에 예산이 투입되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오늘 이 자리의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별다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쏟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기후위기 대응의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부처간의 이해를 초월한 힘있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CC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와 방법론을 채택했는지, 그 근거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일반 시민들 모두가 믿고, 장기적으로 그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보장]

영국의 CCC의 사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독립성 등이 명시돼 있고, 그걸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또한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위원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과 증거 수집이 이뤄집니다.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만들어진 과정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됐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2019년 3차에너지 기본계획 위원 중 절반이 이해당사자인 발전사/한전으로부터 용역을 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해 가장 이슈가 됐던 발전부문 3400만톤 추가감축은 다음 계획 때 반영하는 것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꾸러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법안에 따라서 규정될 위원회가 그런 문제점들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특정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를 자연스럽게 대변할 수밖에 없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는 지금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청년들을 논의 과정에 참여시킬 수는 없을까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어떤 산업이나 업계의 이해관계에도 포섭되지 않고 토론하고 결과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대부분의 인생을 기후위기의 현실과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청년 당사자라는 이해관계만이라도 인정해줄 수는 없을까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열렸던 기후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들이 전향적인 목표를 내세우는 동안, 한국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NDC)를 연내 상향하겠다는, 6개월 전과 똑같은 얘기만 늘어놓아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그대로 두면서 산정 기준치를 바꾼 것을 '목표 상향'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탈탄소 기본법안 발의 후 후속 논의가 늦어진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원칙들을 반영하는 것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진정성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